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에서는 각방면으로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당면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거나, 학자들의 분석과 이론 등을 참고로 하여 장래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에 모이는 경향이 있고, 이들이 테크니크집단을 형성하여 경제발전계획을 정부의 각종 정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는 전인차의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행정의 복잡화 및 전문화의 경향으로 인하여 일부로부터 중지를 모으는 방법으로서 고문 또는 자문의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원본들의 충고, 학계의 신선한 발상 또는 민간부문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나 현상파악이 이루어져서 행정부의 정책수립과 실시와 평가

時評



宋相現

<서울大法大교수>

諮問會議은 영의 虛實

의, 유신당시 헌법 기타 정관안보 법령을 제정하는데 참여한 학자들 국부와의 그 부와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약한 전문가들 그리고 6공 단행위원회의 민화위원들이 이 밖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경우에 지혜를 빌려준 브레인들이 그들이 정치적 과당기에 수행한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일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구성을 갖출 목적으로 정책자문회의에 일단 상정하여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 요지 행위적 절차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회피도 할 수 있고, 또한 여론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대체로 언론현상의 선도적 역할을 할 위원들의 비판을 예방할 수도 있는 부수적 이점까지 누리게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장이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 임명된 지명 하기도 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하여 대화이나 이의집단 또는 공의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하면 그간은 단체내에서 그 단체의 장과 친한 인사가 실명이나 이름과는 무관하게 천거되는 수도 많다. 이처럼 구성원 자문위원회의 회의평

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틀에 박힌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해주시고 하는 등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각부처와 관련을 맺으면서 명멸했던 각종 위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참으로 가지각색이었다. 우선 역대의 집권 세력은 그들이 새로 등장하여 정치 적 기반을 닦아야 할 때마다 자기네 핵심인물들을 각계의 유명인사들과 적당히 섞어서 필요한 위원회를 조직한다. 비상시에 대처하는 강력한 결단을 내린 데 앞장서서 이용한 것이다. 5·16혁명직후 국가 재건최고회의의 고문들과 자문회의

반대층이나 학생들의 눈에 정통성이 없는 정권장악을 합리화시켜 주거나 심지어는 권력에 추세하는 지식인집단으로 비쳐져서 비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학가지 모음은 정부가 자문회의를 모양새 좋은 장신들로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방청을 된다. 이 경우에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시대적 인물이건 실력이 없건 삼판했고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면 좋하기 때문에 학생

정부를 보면 정부측으로부터 주로 일

정을 보면 정부측으로부터 주로 일

본의 예와 비교하는 배경설명을 한 다음 공적적으론은 일련의 법령이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안전보고를 하는 것이 실상이다. 정통측에서 계급 높은 분이 주재하는 회의인 경우에는 감명받은 말씀, 좋은진 말씀 등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자문회의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존재가치가 있는만큼 각부처에서 법령상 구체적설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결정적이라 실천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것이 포화점에 다다르면 일체해정리 또는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한다. 이렇게 되고 보면 각부처마다 필연적인 위원회를 법령에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확보하려는 경향이 생겨 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두 자기네 부처의 위원회를 격상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각 부처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로서는

성에 차지 않아서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고 마침내 대통령직수원위원회를 발족해야 하는 등 격상을 위한 경향이 치열해진다. 각부처의 이같은 경향은 요즈음 당면문제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세미나눔 학술포럼에서 절실히 면 해결방안으로써 제시되는 대통령직수원위원구성, 독립한부·처·청 등의 설치 등 기구 신설 타당성과 꼭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른바 여론이나 연구보고서의 지원 자격까지 받아가면서 그 기세를 더해 간다.

그러나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거나 국무총리가 어떻게 그 많은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거느릴 수 있는지의 염려이며 실제로 정부 고위층 직속의 위원회들이 발족한 유한할 뿐 자임새 있는 운영을 통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은 거의 접해본 일이 없다. 이쯤 되고 보면 하나하나 각종 자문위원회 제도 운영의 허와 실에 관해서 엄밀히 따져보아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